

虛僞 打開의 자세 찾겠다

대학은 자율화해야

대학! 내가 오랫동안 유학하던 서독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명물 하나가 있다. 그것은 학생감옥이다. 지금은 관광객의 구경거리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대학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가장 잘 표시한다. 중세기에 발생한 대학은 교회와 더불어 자유의 「성역」이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가 학생인 한 학원영역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를 쫓던 경관도 그 영역 밖에서 닭쫓던 개처럼 멍청히 쳐다볼 뿐, 한 발짝도 들어서서는 안 됐던 것이다. 그만큼 자유가 보장됐다. 그러나 이 자유의 성역은 교회의 경우와 다르다. 교회 영역에 들어서면 무조건 생존권의 보장을 받지만, 대학의 자유는 자율권의 천제 아래 인정되는 것인데, 그것은 지식 사회로서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대학인으로서 학생들은 자신의 명예를 책임의식으로 수호한다. 그러므로 권력의 기준과 상관없이 지성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들 스스로 동료들 자치제내의 재판부에 회부하여, 정당한 재판과정을 거쳐서 유죄로 판결되면 학원내의 감옥에 수용했던 것이다. 그 재판은 물론 모의재판이 아니었고, 그 자율적 재판정이 법률실험 현장이 아니라, 정말 시비를 가

리고 정의를 규정하는 장이었다.

다시 돌아갈 대학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먼저 대학교육이 생각나는 것은 내 마음 깊이 한처럼 맺힌 것이 드러나는 셈이다. 서구 중세기 대학의 자유를 그대로 오늘에 옮겨 올 수는 없다. 그 자유는 이른바, 지식계층이 향유한 특권으로 일반인과 구별되는 엘리트의식을 낳게 해서 지배의욕을 배양했다는 점에서 멀리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하면 학문적 자유를 대전제로 하거나, 그렇지 못하겠거든 대학을 영어의 유니버시티로 번역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사회는 그 나라 최고 지성집단이다. 그것은 그 나라 국민역량을 압축한 곳일 뿐 아니라, 그 나라가 향할 이념이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두뇌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 모인 곳이며, 그것을 연마해 내는 곳이다. 참 대학이면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지성이 모여 교수진을 구성하고, 치열한 경쟁의 관문을 뚫고 들어온 미래를 가늠할 학생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집단에 자유와 자율권을 주면 어떤 혼란이 올 것이라며, 강의 내용까지 감시해야 비로소 나라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형편이라면, 그 정부의 무능을 드러냈거나, 아니면, 그 국민은 자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사회의 자율화를 억제하면서 민주주의 정치를 표방한다면, 국민의 최선의 길로 선출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면, 그 국민은 자치 능력이 없다고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학사회가 자율의 능력이 없다고 전제하는 어떤 정부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말한다면, 웃기는 얘기다. 대학이 자치 능력이 없는데, 국민투표에 의한 의회체제나, 지방 자치체제를 어떻게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지시일변도의 대학경제적 문교정책은 바로 그 정권의 정체를 그대로 노출한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워하는 대학은 학문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 장소다. 그래야만 학생들과 아무런 유보 없이 眞實을 추구하고

토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신념을 갖고 사회현장에 나갈 수 있겠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에게 터부로 되어 있는 마르크시즘 내지 공산주의 문제를 보자.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일반에게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실정인 것은 모두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 가지 대전제가 절대로 필요하다. 하나는 공산주의에 대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또 하나는 이론에 있어서도 신념에 찬 대결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민족적 통일을 기어코 성취해야 할 민족적 절대 과제 앞에 서 있으므로 어차피 이데올로기와의 대결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 관 ^{추도}의 주입식 흑백논리로 계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이것은 대학이 지닌 민족적 과제다. 대학사회에 그 문제를 풀어놓으면, 공산주의에 감염되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터부시하면, 그것은 거꾸로 공산주의의 강력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아니면 대학사회를 불신임한다는 결론만 나온다. 나는 우리 대학사회가 그런 이론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것의 치명적인 허점과 모순성을 찾아, 신념으로 무장하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미 개방사회에 있어서는 공산주의가 非神話化된지 오래다. 이른바 서방세계는 공산당을 법적으로 인정했는데, 그 결과는 현실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면역성과 非神話化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불안의 요소는 바로 '禁斷의 매력'이다. 이 禁斷이 그 진상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상화하는 소지가 되는 것이다.

대학에선 정규강의나 진행되어 학점만 따면 된다는 사고가 자명화되도록 이른 것은, 이미 대학이 학구의 전당이라는 것을 부정한 결과다. 교수는 강의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사고는 교수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진리를 진리대로 토론할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중요한 전수의 장은 강의보다 세

미나에 있으며, 그보다 더 진지한 장소는 문제의식을 가진 구성원들이 하는 서클 안에서의 토론이다. 토론은 어떤 문제 앞에 正과 反이 맞설 때 성립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결론이 내려진 제한 속에서 토론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비꼬려만 채 주먹질하는 권투와도 같다. 그러므로 서클활동이 그토록 서리를 맞았던 시절은 영원히 지나가야 한다.

이러한 학문의 자유를 회구하는 것은 개인주의적 자유를 권리로 내세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하며 개척해 나가기 위한 힘의 배양과 활용을 위해서다. 대학의 자율화는 특히 對北관계에서 볼 때 민족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대 문제다.

不信 풍조부터 제거해야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은 대학사회의 암적 요소를 제거하는 대전제가 된다. 대학이 제 면모를 찾으려면, 그 안에 만연된 不信풍조가 제거돼야 한다. 아마 대학사회에 몸 담지 않은 사람은 대학 안의 불신풍조가 얼마나 심화된 암적 요소인지 모를 것이다. 특히 지시만을 상책으로 아는 정책기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까닭이 없다. 까닭은 저들이 대학을 병들게 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대학은——어느 사회인들 그렇지 않으랴마는——무엇보다 말이 통해야 한다. 이성적이고 합리성을 좌표로 내 세우고, 그 바탕에서 모든 것을 추구해야 하는 대학사회에 그렇게 오랜 세월 말이 통하지 않는 非理가 강제됐는데 불신풍조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랴. 교수가 찾아오는 학생을 가려 보고, 묻는 말에도 대답을 주저하고, 학생들에게 감시원으로 착각되고, 이유를 명시하지도 않은 채, 자기 제자들을 무더기로 제적하도록 강요당하는 힘 앞에 바른 말 하나도 못 하는 코너에 몰린 교수가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해도 학생들이 코방귀나 뀌겠

는가! 더우기 제자를 내쫓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위해 학칙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야 하는 것이 대학이라면, 그것은 모멸과 곤욕의 장소 이상일 수가 없다. “선생님 왜 이래야 합니까?”라는 가슴 뻐힌 제자의 절규 같은 질문에 “나도 몰라”라고 응수할 수밖에 없다면 이 민족의 장래는 없다. 대학은 ‘참’이 왕좌에 앉아야 한다. 참 앞에는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 그곳은 선생과 학생이 주종관계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교수나 학생이나 모두 진리라는 공통분모에 연결되고 상관되는 곳이다. 교수가 강의에서는 객관성 있는 참을 가르치고, 행동으로는 학생에게 非理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교수라고 언제나 ‘참’을 가르칠 수 있다는 법도 없다.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는 진리에의 복종의 자세다. 이런 자세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是를 非라고 강요하는 힘에 대해서는 바로 그 ‘참’ 때문에 항거해야 비로소 교수와 학생의 관계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된다.

다시 만날 학생들을 생각하면 기쁘다. 그러나 그 만날 상황이 전과 같다면, 그들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는다. 교과서적 지식이나 전달하면, 내 임무는 끝났다는 따위의 교수로 학생을 다시 대할 마음은 없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방법은 글을 쓰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대학은 지식의 전당이기 전에 지식인들의 집단이다. 그러므로 지적 전달과 인격적인 만남이 유리될 수 없는 것이다. 앎을 삶과 유리시킨 것은 西歐에서 들어온 학문 풍조다. 이런 풍조가 세상에서 ‘스승’을 쓸어 버리게 한 요인이 됐다. 거기에 정치권력의 집중화로 생긴 자율권의 박탈이 대학사회의 인간소외를 가져 왔는데, 교수들은 테크노크라시 시대를 자명적인 듯 전제하고, 그 안에 기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처럼 자기 위치를 체념적으로 제한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도 교수에게 지식 전수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게 됐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는 時勢 앞에서의 무

능자로 치부해 버리므로, 어떤 문제를 의논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지 오래다. 나는 그런 교수로 학생들을 다시 대할 마음은 없다. 교수와 학생 간에는 신의가 중요하다. 교수가 지식의 전능자처럼 임할 때는 지났다. 교수가 홀로 터득한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이 대학이 아니라, 문제 앞에 교수와 학생이 더불어 그 대답을 찾는 것이 대학사회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연결된 두 사이를 어떤 세력도 침해해서는 안된다. 학생지도의 자율권은 박탈하고, 학생이 일으킨 문제의 책임을 추궁하는 따위의 해괴한 부조리가 있는 한, 대학은 불신으로 쇠잔해질 뿐일 것이다.

오랜 불신풍조는 교수나 학생들이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도,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풍조를 낳게 했다. 기대하지 않는 대상에게, 열심을 낼 의욕을 상실한 교수는 利己的 처세술만 익히게 된다. 교수에 대한不信을 표출하는 것을, 자기 잠재능력을 과시하는 방망이처럼 생각해 온 학생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동한히 하는 것을 권리처럼 아는 풍조가 생겼다. “학생은 공부하지 않는다”는 교수들의 나무람과, “교수들은 무능하다”는 비판이 평행을 이루어, 결국 대학은 황무지화된다. 제 할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의 소리에 편승할 마음은 없다. 대학의 불신풍조를 몰아 내려면, 성실하게 잘못된 것은 깨끗하게 시인하고 새 출발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명예의 상처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실은 진리를 자신보다 더 존중함으로써, 그것을 살리겠다는 숭고한 결단인 것이다.

이같은 생각의 발전은 자기 제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언어 없이, 내쫓아야 하는 결정에 가담한 과거를 가졌고, 또 자신이 그런 처지를 당했었는데, 그 학생들과 더불어 학원에 돌아갔을 때, 다각적으로 생길 수 있는 미묘한 분위기,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염원에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사회는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 출발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단 자율권이 절대 보장될 때, 이 확신이 현실이 될 것이다.

모범생은 새 가능성은 아니다

문교부에서 교복의 자율화를 시달렸다는데, 각 학교 당국이 오히려 적극 호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사람들 중에는 제복을 제거하면, 사회의 빈부차가 반영돼서 안된다는 이견이 있었다. 그건 교복으로나마 사회 모순을 학교 안에서 덮어 두자는 알파한 생각이다. 이런 견해는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요인을 간과한 것이다. 획일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학생 제복은 획일주의의 상징으로서, 일본 군국주의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유물이다. 왜 다른 것은 다 바꾼다면서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을 제복으로, 그것도 일제의 망령으로 묶어 두려는 것인가.

이른바 모범생이라는 것도 이미 만든 틀에 잘 맞고, 그것에 잘 적응하는 학생을 말한다. 이것 역시 획일주의에 입각한 개념이다. 오늘 우리 교육계에서 모범생 像이 일제시대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 극히 의심스럽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일제의 유형이 정좌한 것을 보지만, 교육계도 여전히 그것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모범생이란, 기존체제에 잘 순응하고, 그것이 필요로 하는 판료형을 말한다. 딴 각도에서 말하면, 옷 사람들의 주문에 잘 응하고, 눈에 들기 위한 재주가 발달한 형이다. 이런 모범생은 주입식 교육에 알맞는다. 바로 그렇기에 이미 거세된 인간형이며, 그런 형에 창의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다칠세라, 부딪칠세라, 하는 따위가 어떻게 새 경지를 개척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우리의 힘으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밤낮 남의 뒤만 쫓으며, 모방이나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그러는 한, 영원히 후진국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남들은 갔다가, 그 길이 막혀서 되돌아 오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들을 가치기준으로 삼고, 그리로 향해 가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버릴 뿐 아니라, 저들이 내버린 쓰레기 처리장화 하는 몸매함을 언제까지 재속할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모험적 개척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가치정립을 못하고 밀려만 가고 있다. 이같은 창피한 위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새 세대의 자기 발전을 위한 최대한의 자유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새로운 가능성의 요람이다. 그들이 지닌 능력은 미지수이나,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싸움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구세대는 저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孔子: 後生可畏). 이미 40~50 세가 넘는 사람들에게 새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공자도 말했듯이 구세대는 이미 가능성이 아닌 기성존재다. 그러므로 교수의 할 일은 자신이 이미 터득한 것을 동원해서 소크라테스의 산파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人材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무엇을 세우는 제목으로 본 것이다. 그런 전제에서 학생을 기르는 것을 培材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 큰 함정이 있다. 그럼 교수는 목수란 말이 되기 때문이며, 이로써 「後生」을 낳은 머리에서 구성된 것을 구축할 재료 정도로 본다는 저의가 있다. 이런 생각은 새 시대의 주인공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능성을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봉건주의의 전형적 사상가인 孔子는 「君子는 不器」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배층은 학생들이 기성의 틀에 잘 맞지 않는 행위를 하면 사정없이 추방해 버리는 만행을 자행했다. 모범생이란, 바로 기성세대의 눈에 드는 학생, 말하자면 재목감이 되고 器具 구실을 할 수 있는 학생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성세대는 스스로 鑄形으로 자처하고, 학생을 鑄物화한다. 그런 한, 보다 나은 내일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保守的 독선인가. 틀에 꼭

맞는 학생은 새것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재에서 불편한 존재라도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의 폭을 넓혀 주는 일을, 교수가 해야 할 큰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수가 아무리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해도, 정치가 현체제에 잘 순응하는 학생을 모범생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전제에서 학원을 지시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 같은 현실에서, 대학을 상아탑으로 해 달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요구다. 현실 감각이 없고, 역사와 유리된 학원속에서 자란 학생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더욱 정치 바람이 학원이라는 장벽은 물론, 너리까지 파고 드는 판국에서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대학에서 정말 내일의 주역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적어도 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그것은 바로 모범생이라는 개념을 깨는 것과 함수관계에 있는 것이다.

모범생도 필요하다. 까닭은 좋은 것을 전승하는 작업에 충실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내일의 개척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일을 향하려는 의지를 비끄러매는 모든 것을 과감히 끊고, 새 경지를 추구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장치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가르칠까

다시 만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이런 생각이 머리에 맴도는 데는 까닭이 있다. 첫째, 전에 가르치던 낡은 노트를 그대로 쓸 수는 없다. 이미 대학의 한 세대(4년)보다도 1년이 더 지나는 동안, 學의 개념이 달라지고 관심과 요청이 달라졌다. 이제는 세계가 지구 가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진 인류의 공동운명체의 장소가 됐다. 어느 나라가 이것은 내 영역이니 간섭 말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상호협력 없이는 이 지구를 지탱해 나갈 수 없게 됐다. 이것은 반면에

싫든 좋은 상호의존적이 됐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더불어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됐다. 더불어 살 줄 모르면, 인류라는 종족의 운명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런데 현실은 바로 그런 연대성에서 얽힌 허다한 문제가 있다. 다국적 기업의 利己의 횡포와, 그것에 맞서 생기는 민족주의, 에너지源의 일원화 등만 보더라도, 그것들이 서로 얽혀서 세계를 어찌면 회복불가능의 전쟁으로 휘몰 수 있는 데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 위기는 가정이라는 단위에 까지 그대로 압축되어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세계 전쟁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연구실에만 앉아 있었다는 사람을 극찬하는 풍조를 방관할 수는 없다. 물리학자가 核폭발에서 발생하는 偉力을 알아 내는 것은 의무요, 권리라 고만 하기에는 다른 심각한 측면이 있다. 그것이 도구로 利用되는 데서 생길 참상을 고려하지 않아도 좋을까? 공상소설도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위험한 시대에 들어섰다. 까닭은 고도로 발달한 물리적 기술이 그 공상을 현실화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든 학문은 사회윤리적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오늘의 당면과제는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정치인에게 맡겨 버려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재래적 의미의 종교나 윤리에 떠맡겨서도 안된다. 대학은 바로 이 과제를 학문하는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모든 학문이 사회윤리적 판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학이 물질 증감의 원리나 밝혀 내는 것이 그 과제일 수 없고, 물질이 더불어 사는 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느냐를 추구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듯이 모든 학문이 사회윤리적 입장에 서야 한다.

이 점에서 神學이나 哲學은 예외일 수 없다. 그것이 人間學이라면 ‘더불어의 존재’를 추구해야 하며, 그것이 ‘절대’의 추구 작업이라면, 그 절대가 더불어 사는 사람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회과학

적 접근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사회과학이 더불어 사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전제에서 말이다.

나의 분야는 신학이다. 나는 신학은 인간학이라는 대전제에 섰으며,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알기 때문에 신학적 테마를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는 입장에서 있다. 이같은 입장은 이른바, 해석학이라는 卓上論에서 정립된 것이 아니라, 사회현장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그 필요성을 터득한 것이다. 그 현장은 학원 내와 밖, 그리스도인, 비종교인, 지식인, 노동자 따위의 기존의 체제나 가치관에 구애되지 않고, 더불어 당하고 있는 입장이 공통분모 구실을 하는 장이다. 그 현장에서 인위적 구분의식에서 발생한 언어와 지식이 더불어 사는데 차단의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더불어 살려고 몸부림치는 동안 그런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터득했다.

내가 가르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느냐 하는 과제다. 신학은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변호하는 이른바 변증론, 교회가 거대한 세력권이 됐을 때 호교론, 지배자의 위치에 있을 때 지배이데올로기 등으로 둔갑하면서 그 전통을 형성해 왔다. 전체를 집약해 말하면, 신학은 그리스도인끼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 왔다. 이같은 자기 중심적 대세는 점차 각 사람에게 個人利己主義로 뿌리를 내리게 됐다. 한국에 들어온 그리스도교는 그 전형적인 것이 없다. 그것은 우리의 정치적 여건과 더불어 염세적이고 피안적인 것이 되어 이 민족과 더불어 사는 종교가 아니라 담장을 쌓고 홀로 살거나 민족의 대열에서 빠져나가는 방도를 가르쳐 왔다. 그리스도교 안에 아직도 個人구원이냐 사회구원이냐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같은 생태가 과거의 일이 아님을 말한다. 너희 구원없이 나 홀로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이 사회의 구원없이 그리스도교회 내

에 모인 사람들의 구원만 있다는 사고는 기득권자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둔갑한 그리스도교 교리에 물든 탓이지 성서의 본래 가르침과는 상반된다. 인간을 영과 육으로 갈라서 보는 것도 성서적이 아니다. 비록 신약에서 그러한 회랍적 용어를 빌고 있으나 실은 인간을 통제적으로 보는 것이 성서의 특징이다. 성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하나님 나라는 이 歷史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到來하는 것이지 인간의 도피처로서의 피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스도교는 왜곡돼 왔나? 거기에는 지배계층의 농간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부분적으로는 억눌린 계층 스스로가 사무친 한을 푸는 길로 선택한 것이다. 지배할 수 있는 權座에 앉아서 부귀를 만끽하면서, 그것에서 비롯되는 非理를 처리하기 위해 피안의 세계를 강조하고 사람들을 부려 먹기 위해 그 인권을 짓밟으면서 그들의 저항을 방지하고 달래기 위해 인간을 영, 육으로 갈라서 해석했던 것이다. 힘 없는, 가난하고 눌린 자들은 그런 교리에서 고통을 달랠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 살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治理의 욕구로 타락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적 교리도 반드시 사회과학적 안목에서 비판되어야 한다. 그 안에 있는 진리도 사회관계의 맥락 속에서 고찰해야 제대로 파악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터부시되고 만다.

더불어 잘사는 길을 가르친 것이 종교라면 역사현실을 떠나서 해석되거나 실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정의의 외면한 神의 義란 죽은 것이며, 노동자나 농민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 고통의 이유에 참여함 없는 사랑의 설교는 의미없이 ‘울리는 팽파리’ 소리와 다를바 없는 것이다.

내가 가르칠 것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내가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고 있다는 생각에 멈칫해진다. 학원 밖에서 보고 당하되, 더불어 당한 많은 경험이 강단신학의 허위성을 볼 수 있게 했으나, 이렇게 허위성을 다 벗기고 새롭게 수립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의문스럽다. 그러나 이미 말한 대로 완결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학원에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더불어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타개해 보겠다는 자세만은 흐트러뜨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할 뿐이다.